

중국의 해양권익 확보 전략



박 병 구
중국 청화대 박사과정

최근 중국의 해양권익 확보 전략은 중국 제3세대 지도자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전환과 중국 내 상황 변화, 국제적인 변수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2004년 3월 10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중앙 인구자원 환경공작회의(中央人口資源環境工作會議)에서 “해양개발은 중국 해양경제 발전의 전략적인 임무”라고 밝히고, 해양조사와 개발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해역사용관리(海域使用管理)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후진타오는 또 2006년 12월 27일 해군 제1차 회의에서 “중국은 해양강국을 건립해야 한다”는 해양강국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해양으로 눈을 돌려야만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양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대국·경제 대국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도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20년 경제 사회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해양개발 실시”를 발표했다. 국무원(國務院)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요강(2006-2020년)”에서 해양을 5대 중점 전략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21세기 중국의 해양 전략을 제시했다. 해양경제건설 중심, 해양개발과 해양보호의 양립, 해양과 육지 일체화 개발의 원칙, 해양개발 과학기술 선행의 원

칙, 협조발전의 원칙, 국가 해양 안보권익의 원칙이 주요 골자다. 중국은 또한 21세기 중반까지 해양개발 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즉, 해양경제부문의 부가가치를 제1단계인 2001~2015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10%로, 제2단계인 2016~2030년까지 18%로, 3단계인 2031~2050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연구, 해양개발, 해양보호, 해양관리,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을 세계적인 위치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에 발표된 ‘국가 해양산업 발전 요강’도 이 같은 목표를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즉 중국은 11·5 계획기간(2006~2010) 동안 해양부문의 총 생산액을 GDP의 11%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또한 해양부문에서 연평균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대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와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수출 상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해상항로 확보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중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호주와 중국, 아프리카와 중국, 중동과 중국, 남미와 중국의 해상항로를 중점 항로로 설정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해상항로 보호의 주요 임무는 핵잠수함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양자원에 대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 간 분쟁의 초점이 도서(島嶼)와 해역 관할권(海域管轄權)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도서(島嶼)는 영해(領海)와 관할 해역의 중요한 표지이자 군사학적으로 “근해방어(近海防禦)”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해는 단순한 지리개념이 아니라 전략개념으로 바뀌고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자원을 둘러싼 충돌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자원 탐사 개발 활동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이 서해와 동중국해 해양경계에서 “중간선 원칙”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지광부(地曠部)는 1981년 2월과 1982년 4월에 두 개의 시험 광구(용정(龍井) 1호와 용정(龍井) 2호)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제3호 광구인 태동(台東) 1호를 뚫은 바 있다. 이들 광구는 모두 동중국해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제5광구와 인접해 있다. 서해의 “중간선 원칙”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만약 “중간선 원칙”으로써 서해 수역을 획정했을 경우 해저 석유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한국 측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중국이 서해 대륙붕에 대해 공동개발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인접 국가와 대륙붕이 서로 겹칠 경우 해저 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沖ノ島)를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도서의 기본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이 해양권익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의뢰하는 방법, 둘째,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 셋째, 광범위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안은 협상을 통한 방법이다. 중국은 해양권익 확보를 위해 양자간, 다자간 회담을 통한 국제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이다. 2003년부터 중국은 러시아, 인도, 미국, 한국 등과 해양환경보호기술협정을 체결했다. 2006년에는 동아시아 15개 회원국이 참여한 장관급 회담에서 “동아시아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협력 파트너”를 발표하고, 3년마다 동아시아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양자간 협의체 구성과 유연한 다자주의는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중국이 해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인도 등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